人文社會科學論叢 2006年 14號 pp. 63~86

인도의 경제개혁이 조직부문 고용에 미친 효과*

최 성 일*

The Effects of Economic Reforms on the Organized Sector's Employment in India

Choi, Sung Il

Abstract

The employment problem in Indi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conomic policy, so it has brought about the political resistance to the economic reforms. In spite of the economic recovery in 1990s, the poor view that the increase of employment does not follow the economic growth is still remaining. On the contrary, although the economic reforms will be shifted to the labor-intensive technology or industry with the progress of opening by upgrading the flexibility of labor market, or conduce to the adjustment of labor market, many others have opinion that the growth of employment will be made after short adjustment period.

This article will investigate the trend of employment in the organized sector through over 20 years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reforms. In this analysis, the organized sector was divided into two sectors -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and each sector more specific industrial sector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we found that the creation of employment missed the cut in private sector. In other words, the insufficiency of employment means the low income level. It curtails production by the insufficiency of consumption demands to the products. So, in private sector, the proper labor policy must be made for the more employment opportunity.

* 한국해양대학교 통상행정학부 조교수

Ⅰ. 머리말

1991년 경제개혁을 실시한 이후 1992/93년에서 2004/05년까지 약 13년간 인도는 연평균 6.2%의 GDP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경제개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인도의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가들 사이에 많은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졌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Mitra, 1993; Agarwal & Goldar, 1995; Kundu, 1997)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증가나 분배의 개선이 뒤따르지 못한 1980년대의 경험 때문이다.(Datt, 1993; Mundle, 1992) 인도에서 고용의 문제는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이며, 경제개혁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촉발시켜 왔다. 1990년대 들어 경제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비관적인 사고가 여전히 남아 있다.(Planning Commission, 2001) 또 경제개혁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으로부터 고용에 대한 악영향이 예측된다. 즉 경제개혁은 한편으로는 경쟁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들에게 노동력을 줄이려는 동기를 제공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기술과 자본재에 대한 접근이 개선됨으로써 생산의 자본집약도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Ghose, 1994)

이에 반해 경제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개방화의 진전과 함께 노동집약적인 기술 및 산업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나(Papola, 1994), 경제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조정이 예상되지만, 짧은 조정기간이 지나면 고용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Bhalotra, 1998)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엄밀한 분석에 의한 예측보다는 단지 그러한 견해들을 표방하고 있을 뿐이다.

경제개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하는 데는 고유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먼저 분석이 통제된 실험이 아니라서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개혁이 진행형이라 언제든지 개혁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개혁이 여러 가지 부문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타부문의 변화가 고용부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어쨌든 경제 개혁 이후 인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단적으

---

* 인도의 회계연도는 올해 4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이기 때문에 대개 1991/92와 같이 표현한다. 1991년 경제개혁의 배경과 전개과정 및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정동현(2001), 조준현(2002) 등을 참조.

dCollection

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공부문이 축소되고 민간부문이 확대된 점이다. 즉 인도의 경제 개혁과정은 조직부문(organised sector) 혹은 공식부문(formal sector)에서 상당한 고용의 확대를 통한 고도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공공부문은 개혁을 통해 잉여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대신 민간부문에서 고용기회가 창출됨으로써 인도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인도의 경제개혁은 고용의 확대를 동반하지 못한, '고용성장 없는 경제성장(jobless growth)'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조직부문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인도의 경제개혁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개혁을 전후한 20여년에 걸친 시기를 대상으로 조직부문에서의 고용추세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분석은 조직부문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고, 또 각각의 부문을 좀 더 구체적인 산업부문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는 인도정부에서 발간한 공식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직부문의 데이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부문은 다시 9개의 하위부문으로 구분된다. 분석 기간은 1981년부터 2003년까지 약 23년간이다. 이 기간은 다시 인도의 경제개혁이 실시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고찰한다. 개혁 이전의 기간은 1980/81년에서 1991/92년의 12년간이며, 개혁 이후의 기간은 1992/93년에서 2002/03년의 11년간이다. 기본적인 분석은 인도의 경제개혁을 전후한 두 기간동안 9개 산업부문에 대해 이루어질 것이다. 고용성장의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서, 산업부문비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율, 고용 증가치, 고용성장율과 같은 지표들을 이용한다.

Ⅱ. 인도의 노동력 구성과 노동개혁

1. 노동력 및 고용구조

인도의 전국표본조사기구(National Sample Survey Organisation, NSSO)가 실시하는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용(조직 및 비조직 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은 1972/73년에서 1977/78년간 2.73%였으나, 1982/83년에서 1987/88년간에는 1.54%로 감소했다. 하지만 1987/88년에서 1993/94년 동안의 연평균 고용성장률은 다

* 인도에서 조직부문(organised sector) 혹은 공식부문(formal sector)이란 모든 공공부문과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비농업 민간부문을 가리킨다.

dCollection

시 2.43%로 증가했고, 1993/94년에서 1999/2000년간에는 다시 약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의 절대 수를 보면 1983년 약 3억 300만 명에서 1994년에는 3억 7,450만 명, 2000년에는 3억 9,7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총인구에서 점하는 노동력 비율은 1993/94년의 42.7%에 비해 1999/2000년에는 40.4%로 떨어졌는데, 이는 노동력의 연평균 성장률이 1983~93년 2.05%에서 1994~2000년에는 1.03%로 하락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고용 성장률의 감소는 이러한 노동력 성장률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인도의 인구, 노동력, 고용의 연평균 성장률

(단위: %)

	인 구	노동력	고 용
1972/73 ~ 1977/78	2.27	2.94	2.73
1977/78 ~ 1982/83	2.19	2.04	2.17
1982/83 ~ 1987/88	2.14	1.74	1.54
1987/88 ~ 1993/94	2.10	2.29	2.43
1993/94 ~ 1999/2000	1.93	1.03	0.98

자료: Government of India, Economic Survey 2001-02; Planning Commission.

〈표 2〉 총고용 및 조직부문의 고용

(단위 : 10만명, %)

부 문	고 용				연평균성장률	
	1983	1988	1994	2000	1983-93	1994-2000
총 인 구	7,182.1	7,900.0	8,950.5	10,041.0	2.12	1.93
총노동력	306.4	3,334.9	3,819.4	4,060.5	2.05	1.03
총고용(A)	3,027.5	3,242.9	3,744.5	3,970.0	2.04	0.98
조직부문고용(B)	240.1	257.1	273.7	279.6	1.20	0.53
공 공	164.6	183.2	194.4	193.1	1.52	-0.03
민 간	75.5	73.9	79.3	86.5	0.45	1.87
B/A	0.079	0.079	0.073	0.070		

자료 : Government of India, *Economic Survey 2001-02*; Planning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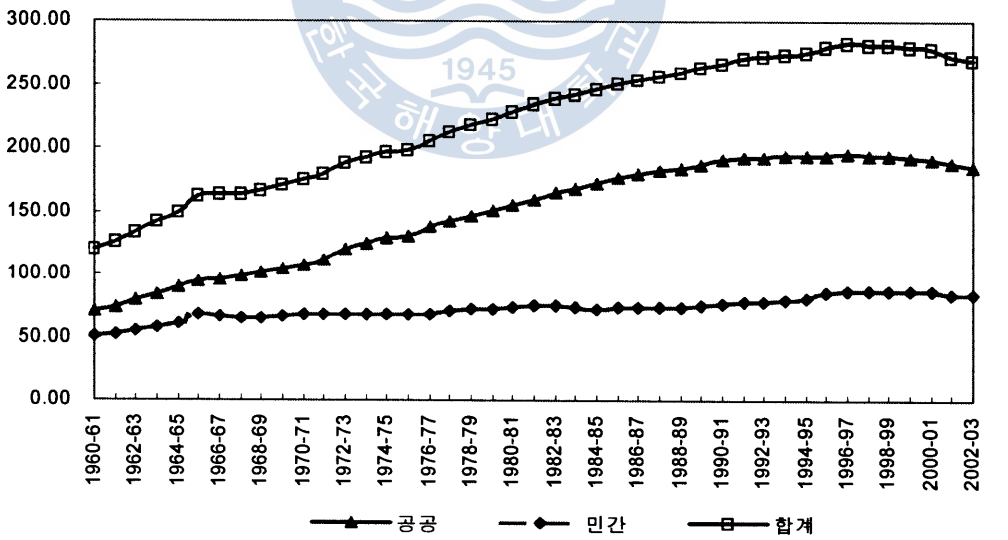
1999/2000년 조직부문의 고용은 약 2,796만 명으로 총고용인구의 약 7%를 점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2/3인 1,931만 명이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으며, 민간

dCollection

부문에서는 약 865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조직부문에서의 고용추세를 보면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이 부문에서의 고용이 예상과는 달리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감소에 기인한다. 공공부문의 연평균 고용성장률은 1983~93년 기간동안 약 1.52%였으나 1994~2000년에는 -0.0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성장률이 감소한 것은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과 정부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정부기관에서 고용을 억제했기 때문이다.(*Economic Survey 2001-02*, 10.9)

조직부문에서의 고용추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90중반에 이르기까지는 노동력이 증가해 감에 따라 고용도 함께 증가해 왔으나 1996/97년 2,824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2002/03년에는 약 2,700만 명을 고용하였다. 여기에는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고용감소가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공공부문은 1996/97년 약 1,956만 명을 고용하고 있었지만 2002/03년에는 약 1,858만 명으로 98만명(5%)이 감소하였으며, 민간부분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868만 명에서 842만 명으로 약 26만 명(3%)이 감소하였다.(<부표 1> 참조).

(단위 : 10만명)



〈그림 1〉 조직부문에서의 고용추이 (1961~2003년)

자료 : Government of India, *Economic Survey*; 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 (CMIE), *India's Social Sectors*.

dCollection

2. 신경제정책과 노동개혁

인도에서는 형식적인 법률과 실질적인 행위 간의 이중성을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인도는 매우 정교한 노동법 체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이 법률에 의해 전체 노동력의 약 10% 이하가 보호를 받는 반면에 나머지 90% 이상 되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규제도 없는 비공식 부문으로 되어 있다.* 또 공식부문 노동자들의 약 절반 정도는 강력한 노동조합을 가진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공식부문의 기업들은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제로 인해 노동의 유연성을 거의 가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도의 노동법에 의하면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정부의 허가를 얻으면 해고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 정부의 허가를 얻을 수가 없다. 고용을 보호하려는 이와 같은 법률체계로 인해 고용주들은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려는 강력한 유인을 가지게 되는데, 엄청난 잉여 노동력과 저렴한 임금을 지닌 인도에서 이러한 경향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경기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노동자들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도의 고용주들은 경기 상승기에 정규 노동자들을 추가로 고용하기를 꺼린다. 그 이유는 한번 고용을 하게 되면 경기침체기에 그 노동력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제비교조사에 따르면 1998년 인도의 노동 유연성은 53개국 가운데 4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Callen, Reynolds & Towe, 2001, 184) 또한 「산업쟁의법(Industrial Disputes Act)」을 통해 정부는 모든 노동분쟁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동관계를 정치화하게 되고 따라서 문제의 해결이 지연되어 버린다.

노동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민감성과 주요 정당에 가입된 노동조합이 지닌 힘 때문에 노동법의 실질적인 개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법개혁에 대한 대중의 반대도 여전히 강력하다. 복지나 실업보험제도가 결여되어 있고 다른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도 공식부문에서 해고를 허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들이 국내외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은 점차로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획득해 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나름대로의 자발적 퇴직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 이러한 사실은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앞에서 이미 언급 했듯이 2000년대 이후 조직부문 또는 공식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약 7%를 정도를 점하고 있다.

dCollection

어떤 경우는 하도급 계약을 하거나 심지어는 법률을 무시하고 노동자들과 계약을 맺기도 한다.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조합들은 그동안 부패와 연관된 문제들로 인해 대중들의 공감을 상실해 왔다. 이처럼 정부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약화된 것을 배경으로 2000년에 라자스탄 주정부는 정부노동자들의 파업을 해결할 수 있었다. 조직부문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후퇴는 인도의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우타르 프라데쉬 주에서 발생한 전력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실패한 이후 현실화 되었다.(Mukherji, 2002, 38)

노동조합에 대한 대중의 입장 변화와 실업계로부터 강력한 압력이 더해지면서, 정부는 공식부문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에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 자발적 퇴직계획을 도입했다. 그동안 부실채권과 잉여 노동력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유 은행들이 공공부문에서 주요정리 대상이 되었다. 86만 명의 공공부문 은행노동자들 가운데 약 9만 명이 퇴직계획을 수용했는데, 이는 퇴직 신청자의 약 2/3에 해당하였다. 중앙정부나 주정부가 소유한 여타 공공부문에서도 비슷한 계획들이 실시됨으로써 점차로 공공부문에서의 잉여 노동력들이 축소되어 갔다. 2001년 정부는 1,000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공식적인 인가 없이 노동자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Jetli, 2004, 140) 이렇게 되면 전체기업의 약 75%가 실질적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된다.*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고용주들의 행동을 제지하는 노동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도의 노동시장은 다른 나라들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애요인이 많고 비효율적이다. 공공부문에 비해서 민간부문의 경우는 앞으로 고용과 해고에 대한 재량권이 더 많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공식부문 노동시장의 규제가 급속히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고용증대는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인도 노동자들은 규제가 없고 더 불확실한 비공식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이 「산업쟁의법」의 수정안은 2002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Jenkins, 2004, 341)

dCollection

Ⅲ. 경제개혁 전후 산업 부문별 고용변화

1. 산업부문별 고용비중

1991년 경제개혁 이전 약 10여 년간에 걸친 공공부문의 산업부문별 고용비중은 <표 3>과 같다. 이에 따르면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Community, Social and Personal services sector)이 공공부문 총 고용의 약 48%를 점하고 있으며, 운수·창고·통신업(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s)이 약 17%, 제조업(Manufacturing)이 약 1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25-6% 정도의 고용은 6개 부문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다. 제조업의 비중은 1987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88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개혁 이전 공공부문의 산업부문별 고용비중

(단위 : %)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공공개인 사회서비스	합계
1980/81	2.99	5.28	9.70	4.41	7.03	0.76	17.50	4.83	47.50	100
1981/82	2.87	5.22	9.98	4.38	6.97	0.71	17.44	5.11	47.33	100
1982/83	2.89	5.37	9.93	4.38	6.81	0.72	17.17	5.30	47.43	100
1983/84	2.90	5.50	10.18	4.35	6.64	0.74	16.98	5.42	47.31	100
1984/85	2.88	5.64	10.19	4.40	6.64	0.76	16.76	5.69	47.04	100
1985/86	2.97	5.46	10.26	4.44	6.68	0.74	16.56	5.82	47.05	100
1986/87	3.09	5.23	10.33	4.38	6.57	0.74	16.48	5.86	47.32	100
1987/88	3.02	5.22	10.19	4.63	6.63	0.76	16.44	5.98	47.13	100
1988/89	3.01	5.18	10.10	4.71	6.21	0.81	16.12	6.09	47.76	100
1989/90	2.93	5.15	9.97	4.78	6.04	0.80	16.11	6.15	48.07	100
1990/91	2.92	5.24	9.72	4.75	6.03	0.79	15.88	6.27	48.42	100
1991/92	2.98	5.14	9.69	4.77	5.99	0.82	15.95	6.32	48.34	100

자료 : Government of India, *Economic Survey* various issues에서 계산

경제개혁 이후의 추세를 고찰한 것이 <표 4>이다.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에서 여전히 높은 고용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보이는 비중의 증가추세가 그대로 이어져 2000년대에 들어서는 약 52%에 이르고

dCollection

있다. 반면에 운수·창고·통신업은 개혁 이전에 비해 감소하여 약 16%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는 2000년대에는 약 7%로 수준으로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

〈표 4〉 개혁 이후 공공부문의 산업부문별 고용비중

(단위 : %)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공공개인 사회서비스	합계
1992/93	2.91	5.16	9.58	4.82	5.97	0.77	15.81	6.48	48.52	100
1993/94	2.80	5.22	9.17	4.82	6.00	0.83	15.86	6.55	48.74	100
1994/95	2.77	5.22	9.02	4.80	5.98	0.83	15.96	6.59	48.83	100
1995/96	2.78	5.11	8.94	4.87	5.97	0.83	15.91	6.59	49.00	100
1996/97	2.73	5.00	8.49	4.89	5.80	0.84	15.81	6.62	49.83	100
1997/98	2.73	4.83	8.32	4.91	5.71	0.84	15.88	6.63	50.14	100
1998/99	2.65	4.77	8.08	4.95	5.70	0.84	15.88	6.67	50.45	100
1999/00	2.66	4.78	7.93	4.90	5.65	0.84	15.93	6.71	50.59	100
2000/01	2.62	4.57	7.47	4.89	5.65	0.85	15.89	6.69	51.36	100
2001/02	2.57	4.59	7.19	4.92	5.47	0.84	16.03	6.55	51.85	100
2002/03	2.72	4.56	6.78	4.91	5.10	0.98	15.82	7.41	51.71	100

자료 : <표 3>과 같음.

민간부문에서의 산업부문별 고용 비중은 공공부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표 5>는 개혁 이전 민간부문의 산업부문별 고용비중을 나타낸 것인데, 제조업,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농업의 세 부문이 고용의 90% 이상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10% 정도가 6개 산업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제조업 부문이 6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각각 약 18%와 11%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초 민간부문의 약 61%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난 제조업은 1983/84년 이후로 계속해서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부문의 경우에는 1980년대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용비중이 높아졌다.

dCollection

〈표 5〉 개혁 이전 민간부문의 산업부문별 고용비중

(단위 : %)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소매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	공공개인사회서비스	합계
1980/81	11.60	1.76	61.46	0.47	0.97	3.75	0.81	2.65	16.52	100
1981/82	11.27	1.71	61.75	0.48	0.94	3.67	0.79	2.70	16.68	100
1982/83	11.22	1.59	61.65	0.49	0.90	3.64	0.78	2.74	16.99	100
1983/84	11.15	1.54	60.89	0.53	0.90	3.76	0.78	2.91	17.55	100
1984/85	11.04	1.55	60.49	0.53	0.96	3.79	0.74	3.00	17.91	100
1985/86	11.15	1.51	60.32	0.54	0.94	3.76	0.73	3.00	18.06	100
1986/87	11.52	1.24	59.89	0.54	0.79	3.76	0.71	3.11	18.45	100
1987/88	11.42	1.26	59.46	0.55	0.68	3.83	0.69	3.22	18.90	100
1988/89	11.64	1.29	58.79	0.52	0.93	3.84	0.68	3.14	19.17	100
1989/90	11.55	1.31	58.78	0.53	0.90	3.84	0.69	3.15	19.26	100
1990/91	11.61	1.30	58.37	0.52	0.95	3.91	0.69	3.31	19.34	100
1991/92	11.62	1.36	58.20	0.51	0.99	3.77	0.69	3.39	19.46	100

자료 : <표 3>과 같음.

개혁 이후의 부문별 고용비중 추이를 고찰한 것이 <표 6>이다. 이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이 매우 높은 고용비중을 여전히 나타내고는 있지만 조직부문 전체 고용에서 점하는 그 비중은 하락하였다. 개혁 이후의 기간동안에는 1996/97년에 60%를 약간 넘은 것으로 제외하고는 모두 60%를 밑돌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그 비중이 바르게 하락하여 2003년에는 56%까지 떨어졌다.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부문은 1980년대 말 이후 19%대를 웃도를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20%를 넘었으며, 2003년에는 약 21%를 점하고 있다. 농업부문은 1990년대 초 약 11% 수준에서 1996/97년 이후 약 1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각각의 산업부문별 고용비중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부문 모두 농업, 제조업, 공공・개인・사회서비스 3개 산업부문에서 고용의 대부분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경우 3개 부문이 전체고용의 약 75%를 점하였고 민간부문의 경우는 90% 이상을 점하였으며, 나머지 약 25%와 약 10%를 각 부문의 6개 산업부문에서 고용하고 있다. 둘째,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의 고용비중(약 50%)이

dCollection

지배적이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제조업의 고용비중(약 60%)이 지배적이었다. 셋째, 개혁 이후의 시기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모두 제조업 분문에서의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개혁 이후 민간부문의 산업부문별 고용비중

(단위 : %)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공공개인 사회서비스	합계
1992/93	11.67	1.22	57.89	0.48	0.93	3.83	0.70	3.53	19.74	100
1993/94	11.13	1.27	58.39	0.50	0.64	3.81	0.71	3.56	19.99	100
1994/95	11.09	1.28	58.40	0.50	0.66	3.82	0.72	3.64	19.89	100
1995/96	10.80	1.26	59.32	0.49	0.62	3.72	0.70	3.60	19.48	100
1996/97	10.50	1.06	60.33	0.47	0.62	3.65	0.73	3.71	18.93	100
1997/98	10.33	1.04	59.82	0.48	0.85	3.67	0.74	3.90	19.17	100
1998/99	10.01	1.00	59.53	0.47	0.82	3.71	0.79	4.12	19.54	100
1999/00	10.45	0.94	58.79	0.47	0.66	3.82	0.81	4.14	19.92	100
2000/01	10.76	0.91	57.95	0.60	0.66	3.92	0.88	4.28	20.04	100
2001/02	10.14	0.81	57.72	0.50	0.66	3.97	0.90	4.64	20.66	100
2002/03	10.63	0.78	56.34	0.59	0.52	4.28	0.94	5.06	20.86	100

자료 : <표 3>과 같음.

2.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고용비율

개혁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때 조직부문 가운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고용비율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비교해 보자. <표 7>은 개혁 이전까지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고용비율(공공/민간 고용비율)을 산업부문별로 고찰한 것이다. 이 비율은 수치가 1보다 적을수록 민간부문에서 더 많이 고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1보다 클수록 공공부문의 고용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보면, 1980/81년 2.09에서 1991/92년에 2.45로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이 사이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이 민간부문에서의 고용보다 더 증가했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부문별로도 보더라도 이러한 추세는 모든 부문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산업부문은 운수·창고·통신업 부문이다. 여기서 공공부문은 민간

dCollection

부문의 고용에 비해 거의 50배를 고용하고 있으며, 전기·가스·수도업 부문에서는 20배 이상, 건설업 부문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17배를 고용하고 있다.

〈표 7〉 개혁 이전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산업부문별 고용비율

(단위 : %)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공공개인 사회서비스	합계
1980/81	0.54	6.29	0.33	19.51	15.13	0.42	45.15	3.82	6.02	2.09
1981/82	0.54	6.45	0.34	19.39	15.66	0.41	46.35	4.00	5.99	2.11
1982/83	0.56	7.37	0.35	19.49	16.47	0.43	47.90	4.21	6.08	2.18
1983/84	0.60	8.20	0.38	18.79	16.97	0.45	50.25	4.27	6.19	2.30
1984/85	0.62	8.62	0.40	19.46	16.37	0.47	53.59	4.49	6.21	2.36
1985/86	0.64	8.70	0.41	19.63	17.12	0.47	54.24	4.66	6.25	2.40
1986/87	0.66	10.35	0.42	19.73	20.43	0.48	57.12	4.61	6.28	2.45
1987/88	0.66	10.28	0.42	20.71	24.28	0.49	59.04	4.60	6.18	2.48
1988/89	0.64	9.96	0.43	22.28	16.61	0.52	58.31	4.80	6.17	2.47
1989/90	0.63	9.76	0.42	22.43	16.68	0.52	58.13	4.83	6.18	2.47
1990/91	0.62	9.99	0.41	22.63	15.74	0.50	57.09	4.70	6.21	2.48
1991/92	0.63	9.22	0.41	22.90	14.76	0.53	56.74	4.56	6.08	2.45

자료 : <표 3>과 같음.

반면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제조업, 도·소매업, 농업인데, 개혁 이전의 시기 동안에는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1980/81년 0.33인데 이것은 제조업에서 공공부문의 고용이 민간부문의 0.33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1991/92년에는 이 수치가 0.41로 높아졌다. 농업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0.54에서 0.63으로 도·소매업에서는 0.42에서 0.53으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개혁 이전인 1980년대 동안에는 공공/민간 고용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증가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 이후 공공/민간 고용비율은 전반적으로 약간 감소하고 있다.(<표 8> 참조) 고용비율이 1992/93년 2.46에서 2002/03년에는 2.21로 약간 떨어졌다. 산업부문별로 고찰해 보아도 광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특히 운수·창고·통신업에서는 1992/93년 55.6에서 2002/03년에는 37.3으

dCollection

로 비율이 하락하였는데 이는 주로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증가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산업부문의 고용비중이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고용증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 또 민간부문의 최대 고용부문인 제조업에서 공공/민간 고용비율이 1992/93년 0.41에서 2002/03년에는 0.27로 하락했는데, 이는 주로 공공부문의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여 전체적으로 공공/민간 고용비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정도의 수치하락은 민간부문에서의 고용기회가 개혁론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지 않았다는 것을 말 해 준다. 결국 개혁 이후 민간부문을 통한 고용창출을 그렇게 크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표 8〉 개혁 이후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산업부문별 고용비율

(단위 : 배)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운수창 고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공공개인 사회서비스	합계
1992/93	0.61	10.39	0.41	24.50	15.81	0.49	55.55	4.52	6.05	2.46
1993/94	0.62	10.05	0.39	23.45	22.88	0.53	55.07	4.51	5.98	2.45
1994/95	0.60	9.86	0.37	23.38	21.96	0.53	53.55	4.38	5.93	2.42
1995/96	0.59	9.28	0.34	22.52	21.87	0.51	51.53	4.18	5.74	2.28
1996/97	0.58	10.63	0.32	23.32	21.00	0.52	49.08	4.02	5.93	2.25
1997/98	0.59	10.30	0.31	22.71	14.99	0.51	47.45	3.78	5.81	2.22
1998/99	0.59	10.64	0.30	23.46	15.59	0.50	44.70	3.62	5.76	2.23
1999/00	0.57	11.41	0.30	23.07	19.16	0.49	43.96	3.62	5.67	2.23
2000/01	0.54	11.08	0.29	17.98	18.96	0.48	40.03	3.46	5.67	2.21
2001/02	0.56	12.66	0.28	21.98	18.32	0.47	39.59	3.15	5.59	2.23
2002/03	0.57	12.83	0.27	18.26	21.55	0.51	37.20	3.23	5.47	2.21

자료 : <표 3>과 같음.

3. 공공부문의 고용 증가치

개혁 이전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증가에는 어떤 일관된 추세를 발견할 수없다. 다만 전체적으로 1980년대 전반에 비해 후반으로 가면서 고용 수의 증가가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말 할 수 있겠다. 이에 비해 개혁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dCollection

이는 개혁 이후 이루어진 공공부문 기업의 민영화 과정과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산업부문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9>는 개혁 이전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이 전년에 비해 몇 명이나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단순히 당해 고용자 수에서 전년도 고용자 수를 뺀 것이다. 따라서 이 수치는 전년에 비해 증가(또는 감소)한 고용자 수를 의미한다.

〈표 9〉 개혁 이전 공공부문의 전년대비 고용 증가치

(단위 : 10만 명)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공공개인 사회서비스	합계
1981/82	-0.06	0.14	0.90	0.15	0.23	-0.04	0.72	0.67	1.92	4.63
1982/83	0.19	0.52	0.42	0.23	0.08	0.05	0.45	0.57	2.59	5.10
1983/84	0.13	0.43	0.83	0.12	0.00	0.06	0.38	0.42	1.75	4.12
1984/85	0.09	0.47	0.43	0.26	0.26	0.07	0.30	0.69	1.42	3.99
1985/86	0.28	-0.08	0.55	0.26	0.35	0.00	0.35	0.47	1.98	4.16
1986/87	0.31	-0.24	0.47	0.04	0.04	0.03	0.41	0.26	2.08	3.40
1987/88	-0.03	0.14	0.05	0.60	0.29	0.05	0.41	0.39	1.06	2.96
1988/89	0.01	0.00	-0.04	0.20	-0.68	0.11	-0.37	0.28	1.76	1.27
1989/90	-0.06	0.10	0.07	0.28	-0.12	0.00	0.49	0.31	2.08	3.15
1990/91	0.07	0.33	-0.18	0.08	0.15	0.00	0.03	0.40	2.08	2.96
1991/92	0.17	-0.12	0.09	0.11	0.02	0.07	0.38	0.20	0.60	1.52

자료 : <표 3>과 같음.

민간부문에서의 경제개혁 이전 전년대비 고용 증가치를 보면 <표 11>과 같다. 이에 의하면 1980년대 전반기에는 다소 하락하다가 후반에는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개혁 이전의 시기 동안 민간부문에서의 고용 발생이 그다지 없었다는 것을 말 해 준다. 산업부문별로 보면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과 금융·보험·부동산업, 도·소매업, 전기·가스·수도업 부문에서는 소폭이나마 대체로 고용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외의 산업부문에서는 상승과 하

* 인도의 민영화과정은 1991/92년 경제개혁과정에서 몇몇 공공부문 기업의 소수 지분을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1999/2000년부터는 전략적인 매각으로 변화되었다. 2003/04년 한 해 동안 공공부문 기업에서의 투자절회(disinvestment in public sector undertakings), 곧 민영화(privatization)는 약 1,555억 루피에 달하였다.(Economic Survey 2003-04, 150)

dCollection

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표 10〉 개혁 이후 공공부문의 전년대비 고용 증가치

(단위 : 10만 명)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부 동산	공공개인 사회서비스	합계
1992/93	-0.11	0.10	-0.10	0.15	0.03	-0.09	-0.09	0.38	0.90	1.17
1993/94	-0.17	0.18	-0.67	0.07	0.13	0.13	0.29	0.21	1.01	1.18
1994/95	-0.06	0.01	-0.28	-0.03	-0.03	0.01	0.22	0.10	0.26	0.20
1995/96	0.01	-0.23	-0.18	0.11	-0.05	0.00	-0.14	-0.03	0.16	-0.35
1996/97	-0.07	-0.15	-0.77	0.10	-0.25	0.02	0.00	0.14	2.27	1.29
1997/98	-0.03	-0.41	-0.45	-0.02	-0.25	0.00	-0.08	-0.06	-0.10	-1.40
1998/99	-0.15	-0.11	-0.47	0.08	-0.02	-0.01	0.00	0.07	0.57	-0.04
1999/00	-0.01	-0.02	-0.38	-0.16	-0.15	0.00	-0.07	0.01	-0.23	-1.01
2000/01	-0.12	-0.49	-1.01	-0.11	-0.11	0.00	-0.35	-0.15	0.59	-1.75
2001/02	-0.19	-0.14	-0.80	-0.12	-0.55	-0.06	-0.33	-0.51	-0.95	-3.65
2002/03	0.23	-0.14	-0.90	-0.10	-0.78	0.25	-0.70	1.47	-1.26	-1.93

자료 : <표 3>과 같음.

〈표 11〉 개혁 이전 민간부문의 전년대비 고용 증가치

(단위 : 10만 명)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부 동산	공공개인 사회서비스	합계
1981/82	-0.07	-0.01	1.16	0.01	-0.01	0.00	0.00	0.08	0.37	1.53
1982/83	-0.04	-0.09	-1.05	0.01	-0.03	-0.02	-0.01	0.03	0.24	-0.96
1983/84	-0.28	-0.07	-0.83	0.02	-0.02	0.01	-0.02	0.07	0.06	-1.06
1984/85	-0.12	0.00	-0.52	0.00	0.04	0.01	-0.03	0.05	0.20	-0.37
1985/86	0.15	-0.02	0.27	0.01	-0.01	0.00	0.00	0.02	0.23	0.65
1986/87	0.26	-0.20	-0.38	0.00	-0.11	0.00	-0.02	0.08	0.27	-0.10
1987/88	-0.04	0.02	-0.15	0.01	-0.08	0.06	-0.01	0.09	0.38	0.28
1988/89	0.24	0.03	-0.12	-0.02	0.19	0.03	0.00	-0.04	0.32	0.63
1989/90	0.08	0.03	0.74	0.01	-0.01	0.05	0.01	0.05	0.31	1.27
1990/91	0.15	0.01	0.24	0.00	0.05	0.09	0.01	0.15	0.25	0.95
1991/92	0.21	0.07	0.85	0.00	0.05	-0.04	0.01	0.12	0.42	1.69

자료 : <표 3>과 같음.

dCollection

〈표 12〉 개혁 이후 민간부문의 전년대비 고용 증가치

(단위 : 10만 명)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부 동산	공공개인 사회서비스	합계
1992/93	0.04	-0.11	-0.21	-0.02	-0.05	0.05	0.01	0.11	0.23	0.05
1993/94	-0.33	0.05	0.85	0.02	-0.22	0.01	0.01	0.05	0.35	0.79
1994/95	0.11	0.02	0.76	0.00	0.02	0.06	0.02	0.11	0.18	1.28
1995/96	0.25	0.04	3.43	0.02	0.00	0.09	0.02	0.13	0.55	4.53
1996/97	-0.07	-0.15	1.90	-0.01	0.01	0.00	0.03	0.16	-0.14	1.73
1997/98	-0.08	-0.01	-0.06	0.01	0.20	0.04	0.02	0.19	0.33	0.64
1998/99	-0.33	-0.04	-0.55	-0.01	-0.03	0.02	0.04	0.17	0.23	-0.50
1999/00	0.33	-0.06	-0.93	0.00	-0.14	0.07	0.01	0.00	0.23	-0.49
2000/01	0.27	-0.02	-0.72	0.11	0.00	0.09	0.06	0.12	0.11	0.02
2001/02	-0.76	-0.11	-1.46	-0.10	-0.01	-0.04	0.00	0.21	0.08	-2.19
2002/03	0.40	-0.02	-1.23	0.08	-0.12	0.25	0.03	0.35	0.14	-0.12

자료 : <표 3>과 같음.

<표 12>는 민간부문에서의 개혁 이후 전년대비 고용 증가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경제개혁 이후 민간부문에서는 공공부문과 달리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1990년대 말 이후에는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1995/96년에는 민간부문에서만 45만 명 이상의 고용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개혁으로 인한 자유화(liberalization)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전년대비 고용 증가치를 이용하여 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경제개혁 전후 고용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면, 개혁과정을 통해 특히 기대되었던 민간부문에서의 고용기회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고용 성장률

개혁 이전과 이후의 고용 성장률 추세를 분석하기 위해 전년대비 고용변화율을 계산해 보았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혁 이전을 보면 1985/86년까지는 고용의 성장률이 연평균 약 2.7% 로 성장해 왔으나 이후에는 그 성장세가 연평균 약

dCollection

1.4%로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시기 동안 연평균 약 2.2%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부문별로 고찰해 보면 대부분 19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산업부문은 전기·가스·수도업, 금융·보험·부동산업,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 등 3개 부문뿐이었다.

〈표 13〉 개혁 이전 공공부문의 고용 성장률

(단위 : %)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공공개인 사회서비스	합계
1981/82	-1.30	1.71	5.99	2.20	2.11	-3.42	2.66	8.96	2.61	2.99
1982/83	4.16	6.25	2.64	3.30	0.72	4.42	1.62	6.99	3.43	3.20
1983/84	2.73	4.86	5.08	1.66	0.00	5.08	1.34	4.82	2.24	2.50
1984/85	1.84	5.07	2.50	3.55	2.32	5.65	1.05	7.55	1.78	2.37
1985/86	5.62	-0.82	3.12	3.43	3.05	0.00	1.21	4.78	2.44	2.41
1986/87	5.89	-2.48	2.59	0.51	0.34	2.29	1.40	2.52	2.50	1.92
1987/88	-0.54	1.49	0.27	7.60	2.45	3.73	1.38	3.69	1.24	1.64
1988/89	0.18	0.00	-0.21	2.36	-5.60	7.91	-1.23	2.56	2.04	0.69
1989/90	-1.08	1.05	0.38	3.22	-1.05	0.00	1.65	2.76	2.36	1.71
1990/91	1.28	3.42	-0.96	0.89	1.32	0.00	0.10	3.47	2.31	1.58
1991/92	3.06	-1.20	0.49	1.22	0.17	4.67	1.26	1.68	0.65	0.80
계	21.84	19.35	21.89	29.94	5.83	30.33	12.44	49.78	23.6	21.81

자료 : <표 3>과 같음.

개혁 이후의 시기를 보면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성장에서 현저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 기간 동안 공공부문에서는 약 -3.3%의 고용성장률을 기록하여 고용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02년 한 해 동안에만 공공부문에서 약 -2%의 고용성장률을 기록했다. 산업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이 기간 동안 매년 모두 마이너스 고용성장을 기록했으며, 건설업의 경우는 1994/95년 이후 모두 마이너스 고용성장을 보였다. 제조업은 이 시기동안 약 -38%의 고용성장률을 기록하여 고용감소가 가장 많았다. 개혁 이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해도 보이지 않았던 농업, 제조업, 공공·개인·사회서비스 3개 산업부문도 개혁 이후의 시기에는 모두 마이너스 고용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개혁 이후 공공부문

dCollection

에서의 이러한 고용성장 추세는 이미 예견되었듯이 경제개혁 이후 인도경제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14〉 개혁 이후 공공부문의 고용 성장률

(단위 : %)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공공개인 사회서비스	합계
1992/93	-1.92	1.01	-0.54	1.64	0.26	-5.73	-0.29	3.13	0.97	0.61
1993/94	-3.02	1.81	-3.62	0.75	1.13	8.78	0.95	1.68	1.08	0.61
1994/95	-1.10	0.10	-1.57	-0.32	-0.26	0.62	0.71	0.79	0.27	0.10
1995/96	0.19	-2.26	-1.03	1.18	-0.43	0.00	-0.45	-0.23	0.17	-0.18
1996/97	-1.30	-1.51	-4.43	1.06	-2.16	1.23	0.00	1.09	2.38	0.66
1997/98	-0.56	-4.19	-2.71	-0.21	-2.20	0.00	-0.26	-0.46	-0.10	-0.72
1998/99	-2.83	-1.17	-2.91	0.84	-0.18	-0.61	0.00	0.54	0.59	-0.02
1999/00	-0.19	-0.22	-2.42	-1.66	-1.36	0.00	-0.23	0.08	-0.23	-0.52
2000/01	-2.33	-5.30	-6.60	-1.16	-1.01	0.00	-1.14	-1.16	0.60	-0.91
2001/02	-3.78	-1.60	-5.59	-1.28	-5.09	-3.68	-1.08	-3.98	-0.97	-1.91
2002/03	4.76	-1.63	-6.67	-1.08	-7.60	15.92	-2.33	11.95	-1.29	-1.03
합계	-12.08	-14.96	-38.09	-0.24	-18.9	6.53	-4.12	13.43	3.47	-3.31

자료 : <표 3>과 같음.

〈표 15〉 개혁 이전 민간부문의 고용 성장률

(단위 : %)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공공개인 사회서비스	합계
1981/82	-0.82	-0.77	2.55	2.86	-1.39	0.00	0.00	4.08	3.03	2.07
1982/83	-0.47	-6.98	-0.11	2.78	-4.23	-0.72	-1.67	1.47	1.91	0.05
1983/84	-3.31	-5.83	-3.93	5.41	-2.94	0.36	-3.39	3.38	0.47	-2.73
1984/85	-1.47	0.00	-1.16	0.00	6.06	0.36	-5.26	2.34	1.55	-0.50
1985/86	1.86	-1.77	0.61	2.56	-1.43	0.00	0.00	0.91	1.76	0.89
1986/87	3.16	-18.02	-0.85	0.00	-15.94	0.00	-3.70	3.62	2.03	-0.14
1987/88	-0.47	2.20	-0.34	2.50	-13.79	2.17	-1.92	3.93	2.80	0.38
1988/89	2.84	3.23	-0.27	-4.88	38.00	1.06	0.00	-1.68	2.29	0.85
1989/90	0.92	3.13	1.69	2.56	-1.45	1.75	1.96	2.14	2.17	1.70
1990/91	1.71	1.01	0.54	0.00	7.35	3.09	1.92	6.28	1.71	1.25
1991/92	2.36	7.00	1.90	0.00	6.85	-1.33	1.89	4.72	2.83	2.20
합계	6.31	-16.8	0.63	13.79	17.09	6.74	-10.17	31.19	22.55	6.02

자료 : <표 3>과 같음.

dCollection

〈표 16〉 개혁 이후 민간부문의 고용 성장률

(단위 : %)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공공개인 사회서비스	합계
1992/93	0.44	-10.28	-0.46	-5.00	-6.41	1.69	1.85	4.14	1.51	0.06
1993/94	-3.60	5.21	1.87	5.26	-30.14	0.33	1.82	1.81	2.26	1.01
1994/95	1.25	1.98	1.64	0.00	3.92	1.99	3.57	3.90	1.14	1.61
1995/96	2.80	3.88	7.29	5.00	0.00	2.92	3.45	4.44	3.43	5.62
1996/97	-0.76	-14.02	3.76	-2.38	1.89	0.00	5.00	5.23	-0.84	2.03
1997/98	-0.88	-1.09	-0.11	2.44	37.04	1.26	3.17	5.90	2.01	0.74
1998/99	-3.65	-4.40	-1.05	-2.38	-4.05	0.62	6.15	4.99	1.37	-0.57
1999/00	3.79	-6.90	-1.80	0.00	-19.72	2.17	1.45	0.00	1.35	-0.56
2000/01	2.99	-2.47	-1.42	26.83	0.00	2.73	8.57	3.35	0.64	0.02
2001/02	-8.16	-13.92	-2.91	-19.23	-1.75	-1.18	0.00	5.68	0.46	-2.53
2002/03	4.68	-2.94	-2.53	19.05	-21.43	7.46	3.95	8.95	0.80	-0.14
합계	-1.1	-44.95	4.28	29.59	-40.65	19.99	38.98	48.39	14.13	7.29

자료 : <표 3>과 같음.

경제개혁 이전 민간부문에서의 고용 추세를 보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산업 전체로 보면 개혁 이전 약 11년간 고용성장은 약 6%로 연평균 약 0.5%에 불과하다. 부문별로 보면 이 기간동안 광업과 운수·창고·통신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고용이 성장했으나 금융·보험·부동산과 공공·개인·사회서비스업에서 20-30%정도의 고용성장이 보일뿐 그렇게 눈에 띄는 고용의 증가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민간부문의 최대 고용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는 이 시기 동안 0.63%의 고용성장이 있었을 뿐이다. 이것은 개혁 이전의 민간부문에서의 고용 창출은 공공부문에 비해 미약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개혁 이후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은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산업부문 전체로 보면 1997/98년까지는 성장률이 계속해서 상승해오다 이후는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 시기 동안 민간부문의 고용 성장률은 약 7.3%이다. 산업부문별로 보면 농업, 광업,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기·가스·수도,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의 3개 산업부문에서 성장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이 시기 동안 약 4.3%의 고용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기에

dCollection

성장률이 높았으나 후반기 이후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개혁 이후 공공부문에서의 고용창출 성과는 개혁의 진행과 더불어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나 민간부문에서 이를 상쇄시킬만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Ⅳ. 요약 및 결론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부문별 총고용에 대한 비중을 분석한 결과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모두 각각 농업, 제조업, 공공・개인・사회서비스 세 개의 산업부문이 고용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개인·사회서비스, 운수·창고·통신, 제조업이 총고용의 약 75%를 담당하였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운수·창고·통신, 공공·개인·사회서비스, 농업이 총고용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었다. 개혁 이후의 기간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모두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부문에 대한 공공부문의 비율 분석에서는 개혁 이후 민간부문을 통한 고용창출의 움직임이 특별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고용 증가치 분석에서는 개혁 이전과 이후의 시기 모두 경제개혁의 과정이 특히 민간부문에서 고용기회를 그렇게 많이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용 성장률 분석에서는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성과는 개혁 이후의 시기에 경제개혁과정과 더불어 대폭 하락하였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의 이러한 고용성장률 하락을 만회해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민간부문에서의 고용 창출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인도에서 경제개혁은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의 채용, 노동생산성의 상승, 임금의 경직성, 노동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했다. 1991년의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개혁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여기서 민영화 정책은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더 많은 고용의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통제수단들이 민간부문으로 넘겨져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10여 년 간에 걸쳐 경제개혁이 실시되었지만 아직도 인도경제는 많은 부문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조직부문의 고용 추세를 분석한 본 연구는 민간부문에서 기대한 만큼의 고용

dCollection

창출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고용기회의 부족은 곧 낮은 소득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생산물에 대한 소비수요의 부족을 야기하여 생산을 감축시킨다. 그러므로 민간부문에서 더 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적절한 노동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정동현, 2001, 「인도의 외환위기와 경제개혁」, 부산대학교 국제지역문제연구소, 『국제지역문제』, 제19권 제2호.

조준현, 2002, 「인도 외환위기의 성격과 재정·공공부문 개혁」, 부산대학교 국제지역문제연구소, 『국제지역문제연구』, 제20권 제1호.

Agarwal, R.N. & B. Goldar, 1995, Economic reforms and employment in India Projections for the year 2001-02, *Indi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vol.38, no.4.

Bhalotra, S.K., 1998, The puzzle of jobless growth in Indian manufacturing,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60, no.1, pp.5-32

Callen, T., P. Reynolds & C. Towe, eds, 2001, *India at the Crossroads: Sustaining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IMF.

Datt, R., 1993, New economic policy and its impact on industrial relations and employment in India, *Indi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vol.36, no.1, pp.66-76.

Ghose, A.K., 1995, Labour market flexibility and the Indian economy, *Indi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vol.38, no.1 pp.55-62.

Government of India, *Economic Survey*, various issues.

Jenkins, Rob, 2004, Labor Policy and the Second Generation of Economic Reform in India, *India Review*, vol.3, no.4 pp.333-363.

Jetli, N.K., 2004, *India: Economic Reforms and Labour Policy*, New Contry

dCollection

창출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고용기회의 부족은 곧 낮은 소득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생산물에 대한 소비수요의 부족을 야기하여 생산을 감축시킨다. 그러므로 민간부문에서 더 많은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적절한 노동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정동현, 2001, 「인도의 외환위기와 경제개혁」, 부산대학교 국제지역문제연구소, 『국제지역문제』, 제19권 제2호.

조준현, 2002, 「인도 외환위기의 성격과 재정·공공부문 개혁」, 부산대학교 국제지역문제연구소, 『국제지역문제연구』, 제20권 제1호.

Agarwal, R.N. & B. Goldar, 1995, Economic reforms and employment in India Projections for the year 2001-02, *Indi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vol.38, no.4.

Bhalotra, S.K., 1998, The puzzle of jobless growth in Indian manufacturing,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60, no.1, pp.5-32

Callen, T., P. Reynolds & C. Towe, eds, 2001, *India at the Crossroads: Sustaining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IMF.

Datt, R., 1993, New economic policy and its impact on industrial relations and employment in India, *Indi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vol.36, no.1, pp.66-76.

Ghose, A.K., 1995, Labour market flexibility and the Indian economy, *Indi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vol.38, no.1 pp.55-62.

Government of India, *Economic Survey*, various issues.

Jenkins, Rob, 2004, Labor Policy and the Second Generation of Economic Reform in India, *India Review*, vol.3, no.4 pp.333-363.

Jetli, N.K., 2004, *India: Economic Reforms and Labour Policy*, New Contry Publications: New Delhi.

Kundu, A., 1997, Trends and structure of employment in the 1990s: Implications for urban growth,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Jun. 14, 1997.

Labour Bureau Government of India, *Pocket Book of Labour Statistics,* Labour Bureau, various issues.

dCollection

Mitra, A., 1993, Urban Employment , migrant labour and structural adjustment, *Indi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vol.37. no.3.

Mukherji, Joydeep, 2002, India's long March to Capitalism, *India Review*, vol.1, no.2, pp.29-60

Mundle, S., 1992, The employment effect of stabilization and related policy changes in India: 1991-2 to 1993-94, *Indi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vol.35, no.2 pp.227-37.

Papola, T.S., 1994, Structural adjustment, labour market flexibility and empolyment, *Indi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vol.37, no.1, pp.3-16.

Planning Commission, 2001, *Report of the Task Force on Employment Opportunities,* Government of India.

World Bank, 2000, Increasing the demand for labour: deregulation to increase export growth, agricultural growth and labour market flexibility, in *India: Reducing Poverty, Acceleration Development,* World Bank.

dCollection

〈부표 1〉 조직부문의 고용 추이

(단위 : 10만명)

년도	공공	민간	합계
1960/61	70.50	50.40	120.90
1961/62	74.17	51.60	125.77
1962/63	79.53	54.50	134.03
1963/64	84.54	57.80	142.34
1964/65	89.57	60.40	149.97
1965/66	93.79	68.13	161.92
1966/67	96.34	66.84	163.18
1967/68	98.02	65.25	163.27
1968/69	100.95	65.28	166.23
1967/70	103.74	66.85	170.59
1970/71	107.31	67.42	174.73
1971/72	112.09	67.69	179.78
1972/73	119.71	68.49	188.20
1973/74	124.80	67.94	192.74
1974/75	128.83	68.07	196.90
1975/76	130.71	68.45	199.16
1976/77	137.66	68.69	206.35
1977/78	142.00	70.43	212.43
1978/79	146.75	72.08	218.83
1979/80	150.80	72.27	223.07
1980/81	154.84	73.95	228.79
1981/82	159.47	75.48	234.95
1982/83	164.57	75.52	240.09
1983/84	168.69	73.46	242.15
1984/85	172.68	73.09	245.77
1985/86	176.84	73.74	250.58
1986/87	180.24	73.64	253.88
1987/88	183.20	73.92	257.12
1988/89	184.47	74.55	259.02
1989/90	187.62	75.82	263.44
1990/91	190.58	76.77	267.35
1991/92	192.10	78.46	270.56
1992/93	193.27	78.51	271.78
1993/94	194.45	79.30	273.75
1994/95	194.65	80.58	275.23
1995/96	194.30	85.11	279.41
1996/97	195.59	86.84	282.43
1997/98	194.19	87.48	281.67
1998/99	194.15	86.98	281.13
1999/00	193.14	86.49	279.63
2000/01	191.39	86.51	277.90
2001/02	187.74	84.32	272.06
2002/03	185.81	84.20	270.01

dCollection

〈부표 2〉 공공부문의 산업부문별 고용추이

(단위 : 10만명)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공공개인 사회서비스	합계
1980-81	4.63	8.18	15.02	6.83	10.89	1.17	27.09	7.48	73.55	154.84
1981-82	4.57	8.32	15.92	6.98	11.12	1.13	27.81	8.15	75.47	159.47
1982-83	4.76	8.84	16.34	7.21	11.20	1.18	28.26	8.72	78.06	164.57
1983-84	4.89	9.27	17.17	7.33	11.20	1.24	28.64	9.14	79.81	168.69
1984-85	4.98	9.74	17.60	7.59	11.46	1.31	28.94	9.83	81.23	172.68
1985-86	5.26	9.66	18.15	7.85	11.81	1.31	29.29	10.30	83.21	176.84
1986-87	5.57	9.42	18.62	7.89	11.85	1.34	29.70	10.56	85.29	180.24
1987-88	5.54	9.56	18.67	8.49	12.14	1.39	30.11	10.95	86.35	183.20
1988-89	5.55	9.56	18.63	8.69	11.46	1.50	29.74	11.23	88.11	184.47
1989-90	5.49	9.66	18.70	8.97	11.34	1.50	30.23	11.54	90.19	187.62
1990-91	5.56	9.99	18.52	9.05	11.49	1.50	30.26	11.94	92.27	190.58
1991-92	5.73	9.87	18.61	9.16	11.51	1.57	30.64	12.14	92.87	192.10
1992-93	5.62	9.97	18.51	9.31	11.54	1.48	30.55	12.52	93.77	193.27
1993-94	5.45	10.15	17.84	9.38	11.67	1.61	30.84	12.73	94.78	194.45
1994-95	5.39	10.16	17.56	9.35	11.64	1.62	31.06	12.83	95.04	194.65
1995-96	5.40	9.93	17.38	9.46	11.59	1.62	30.92	12.80	95.20	194.30
1996-97	5.33	9.78	16.61	9.56	11.34	1.64	30.92	12.94	97.47	195.59
1997-98	5.30	9.37	16.16	9.54	11.09	1.64	30.84	12.88	97.37	194.19
1998-99	5.15	9.26	15.69	9.62	11.07	1.63	30.84	12.95	97.94	194.15
1999-00	5.14	9.24	15.31	9.46	10.92	1.63	30.77	12.96	97.71	193.14
2000-01	5.02	8.75	14.30	9.35	10.81	1.63	30.42	12.81	98.30	191.39
2001-02	4.83	8.61	13.50	9.23	10.26	1.57	30.09	12.30	97.35	187.74
2002-03	5.06	8.47	12.60	9.13	9.48	1.82	29.39	13.77	96.09	185.81

〈부표 3〉 민간부문의 산업부문별 고용추이

(단위: 10만명)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	도소매	운수창고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공공개인 사회서비스	합계
1980-81	8.58	1.30	45.45	0.35	0.72	2.77	0.60	1.96	12.22	73.95
1981-82	8.51	1.29	46.61	0.36	0.71	2.77	0.60	2.04	12.59	75.48
1982-83	8.47	1.20	46.56	0.37	0.68	2.75	0.59	2.07	12.83	75.52
1983-84	8.19	1.13	44.73	0.39	0.66	2.76	0.57	2.14	12.89	73.46
1984-85	8.07	1.13	44.21	0.39	0.70	2.77	0.54	2.19	13.09	73.09
1985-86	8.22	1.11	44.48	0.40	0.69	2.77	0.54	2.21	13.32	73.74
1986-87	8.48	0.91	44.10	0.40	0.58	2.77	0.52	2.29	13.59	73.64
1987-88	8.44	0.93	43.95	0.41	0.50	2.83	0.51	2.38	13.97	73.92
1988-89	8.68	0.96	43.83	0.39	0.69	2.86	0.51	2.34	14.29	74.55
1989-90	8.76	0.99	44.57	0.40	0.68	2.91	0.52	2.39	14.60	75.82
1990-91	8.91	1.00	44.81	0.40	0.73	3.00	0.53	2.54	14.85	76.77
1991-92	9.12	1.07	45.66	0.40	0.78	2.96	0.54	2.66	15.27	78.46
1992-93	9.16	0.96	45.45	0.38	0.73	3.01	0.55	2.77	15.50	78.51
1993-94	8.83	1.01	46.30	0.40	0.51	3.02	0.56	2.82	15.85	79.30
1994-95	8.94	1.03	47.06	0.40	0.53	3.08	0.58	2.93	16.03	80.58
1995-96	9.19	1.07	50.49	0.42	0.53	3.17	0.60	3.06	16.58	85.11
1996-97	9.12	0.92	52.39	0.41	0.54	3.17	0.63	3.22	16.44	86.84
1997-98	9.04	0.91	52.33	0.42	0.74	3.21	0.65	3.41	16.77	87.48
1998-99	8.71	0.87	51.78	0.41	0.71	3.23	0.69	3.58	17.00	86.98
1999-00	9.04	0.81	50.85	0.41	0.57	3.30	0.70	3.58	17.23	86.49
2000-01	9.31	0.79	50.13	0.52	0.57	3.39	0.76	3.70	17.34	86.51
2001-02	8.55	0.68	48.67	0.42	0.56	3.35	0.76	3.91	17.42	84.32
2002-03	8.95	0.66	47.44	0.50	0.44	3.60	0.79	4.26	17.56	84.20

dCollection